



임단협 설문서 66% “임금 5% 이상 인상해야” ...수년간 후퇴한 처우 정상화 차원 인원 결원·감축에도 충원없고 업무량 ↑ ...“단협서 근로조건 개선 요구해야”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후퇴한 처우와 근로조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1~17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과거와 달리 대상자를 조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성원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총 구성원 744명 가운데 과반인 403명(54.17%)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임단협 관련 11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결과는 현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절대 다수인 71.07%가 자신의 임금 수준에 대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3.74%에 불과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66.33%가 이번 임단협에서 ‘5%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과반인 56.1%가 ‘수년간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임금 인상 또는 임금 동결’을 꼽았고, 후 순위로는 ‘낮은 수당과 그림자 노동에 대한 보상 부족’(23.51%), ‘노동의 양과 강도 증가’(19.05%) 등이 있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누적된 처우 후퇴와 근로조건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동의 양과 강도가 증가한 이유로는 ‘취재·영업 등 기본 업무 부담 증가’가 56.91%로 가장 많았다.

결원 충원이 줄거나 인원 감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었고, 그 결과 사실상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설문 참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제시해야 할 핵심 요구로는 ‘기본급 인상’이 48.25%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왔다.

또 법정 기준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5%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주요 수당의 현실화’가 43.6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단체협약 요구사항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유급·재충전·근속휴가 등)’이 68.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근로조건이 후퇴한 상황에서 업무량은 늘었지만, 휴가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복리후생 강화(유자녀 장학금·주택자금 대출·경조사비 등)’가 18.77%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5.4%)으로는 ▲연차휴가 의무사용일 17일을 14일로 축소 ▲싱글·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배려 정책 ▲해외출장비 현실화 및 지급 방식 원상 복구(법인카드 폐지) ▲법인카드 전 사원 도입 ▲미혼 사원 복지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편 노사는 지난 5일 임단협 상견례와 1차 본회의를 열었고, 7일에는 1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그동안 누적된 처우 후퇴와 근로조건 악화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성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진흥법 설문] ‘공공성 명문화’, ‘정치후견주의 청산’, ‘재정안정화’등 목표 도출

지난 12월 노동조합이 연합뉴스 구성원 전체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통신진흥법(이하 진흥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은 ‘연합뉴스 공공성, 공적 기능 수행 명문화(83.6%)’, ‘진흥회 이사 확대를 통한 정치후견주의 청산(60.8%)’, ‘편집권 독립 조항 의무화(65.9%)’, ‘재정 안정화(77.9%)’였다.

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첫 질문에는 66.9%가 긍정 답변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7일 민형배 의원과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진흥회 이사 숫자 11명으로 확대, 부칙을 통해 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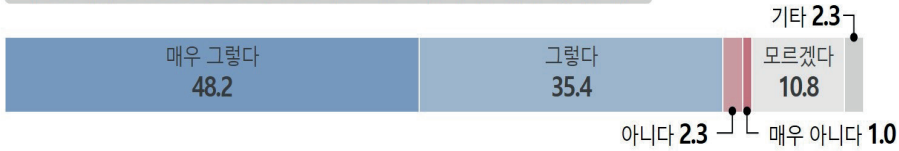
정안 공포 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평가와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법 개정 시도와 회사의 반대 의견 제출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그런데도 전체 구성원 744명의 과반인 403명

1면에 이어

(54.17%)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3분의 2가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2003년 6년 한시 특별법으로 공포되었고 2009년 일반법으로 전환된 진흥법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흥법에 '공공성'과 '공적 임무 수행'을 명문화해야 한다(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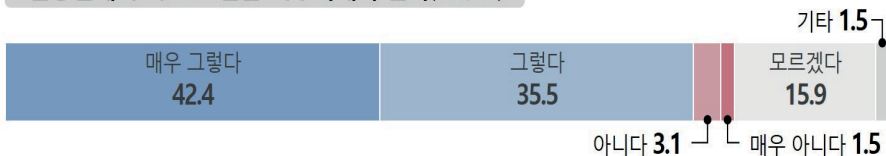


아울러 절대다수의 구성원은 진흥법 내 '연합뉴스사'의 지위와 임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공공성과 공적 기능 수행 조항의 명문화(83.6%)'를 꼽았다.

현 진흥법 제5조는 뉴스 통신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지위, 업무)에는 작년 개정 공포된 방송법이 한국방송공사의 지위와 임무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한 법조문을 결여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연합뉴스의 임무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국가가 위탁한 공적 기능 수행을 법조문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 정산 및 예산 보존의 근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흥법에 구독료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단위=%)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재정 안정화'를 가장 시급한 목표로 꼽았다 (77.9%).

이는 지난 정권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구독료와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예산 보존액의 80%를 삭감한 결과, 연합뉴스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독료 및 예산 보전'을 의무화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구성원 의견이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드러난 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2003년 진흥법이 만들어진 이래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규모의 예산 삭감 사태는 없었다는 점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연합뉴스 예산 대폭 삭감은 공영언론사를 예산을 무기로 휘두르려 한 언론장악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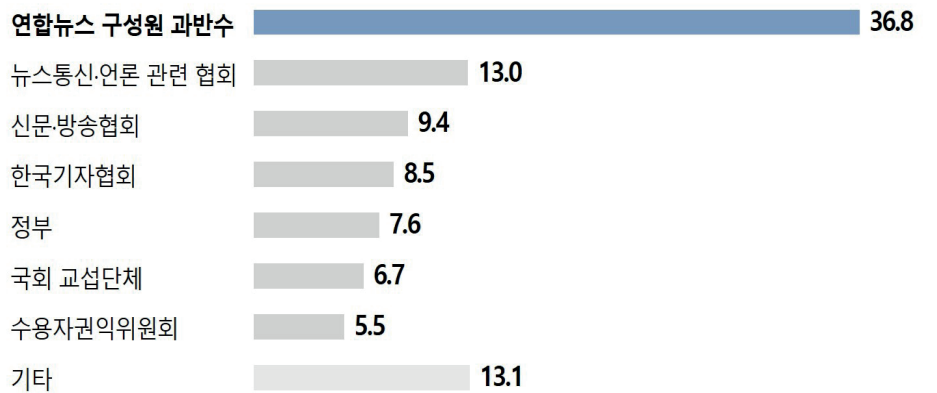
진흥법 개정안에서 정치권 추천 이사 몫을 줄여야 한다 (단위=%)



구성원들은 또한 정치권의 과도한 지배 구조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행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설문 참여자의 60% 이상이 국회 교섭단체 등 정치권의 추천 몫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7명 구성의 진흥회 이사 숫자 중 정부와 정치권 추천 몫이 5명이며 진흥회 출범이래 7차례 진행된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정권과 정치권의 낙점을 받지 않은 후보가 선임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진흥회가 더 이상 정치권의 낙점 기관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한다면 어떤 주체를? (단위=%, 복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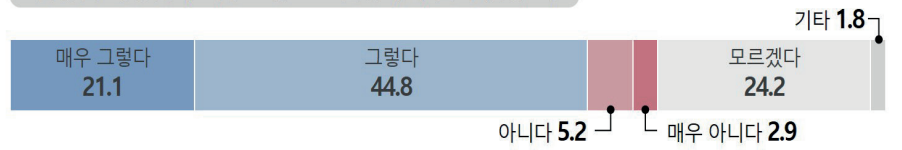


연합뉴스 사장이 되기 위해 정권과 정치권의 낙점을 받아야 하는 왜곡된 현실이 고착해 왔으며, 이는 공영언론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성원들이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로 '연합뉴스 구성원 과반수(36.8%)'를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를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바로 현장에서 뉴스를 만들고 책임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된 지배구조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와 '편집규약 이행'을 진흥법 개정안에 의무조항으로 반영해야 한다 (단위=%)



한편 '편집규약 준수'와 '편집총국장 임면 동의제'를 법에 반영하라는 요구(65.9%) 역시 압도적으로 확인됐다.

2012년 '공정보도 쟁취'를 목표로 103일의 총파업을 진행해 노사 합의로 만들어 낸 '편집총국장 임면 동의제'는 편집 최고 책임자의 임명과 면직을 기자직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인 제도이며 노사 단체협약 사안이지만 아직도 진흥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진흥법 개정안에서 3개월 내 대표이사 선임 부칙이 필요하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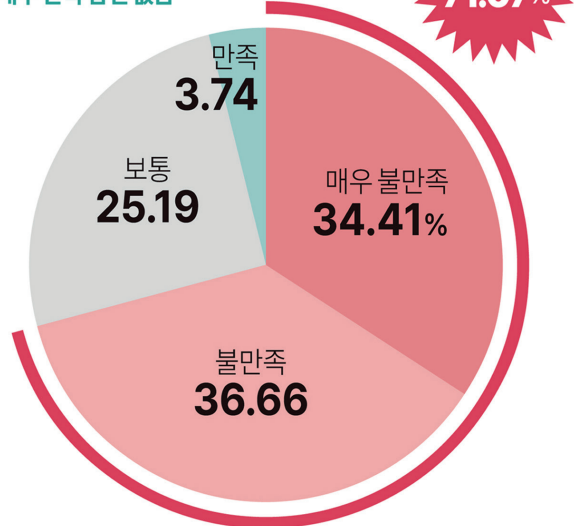


다만 대표이사 임기 단축을 둘러싼 부칙에 대해서는 구성원 의견이 긍정(43.7%), 모르겠다(32.2%), 부정(22.5%)으로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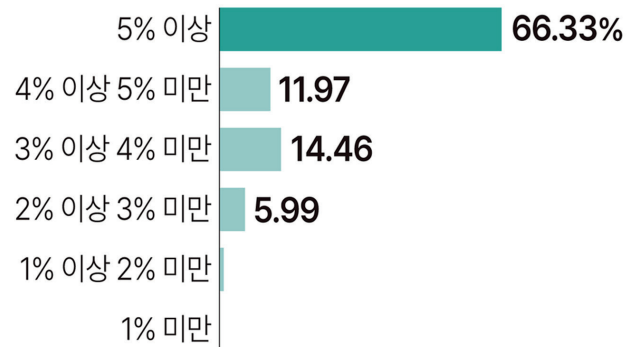
이는 현 경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 개정이 또 다른 정치 개입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조합은 ▲진흥법 개정 논의 과정에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입법부 압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 ▲연합뉴스 구성원 과반을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로 확정 짓고 이사 추천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부칙을 포함해 국민 추천 위원회 등 이번 설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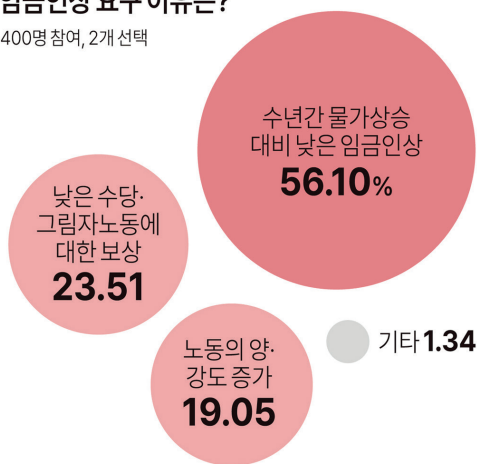
임금 수준 만족도 401명 참여
현재 본인의 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매우 만족 답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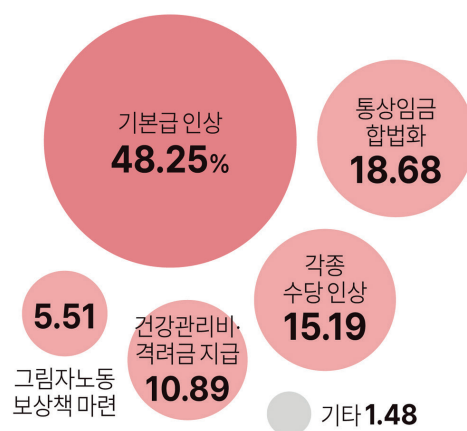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은 몇%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1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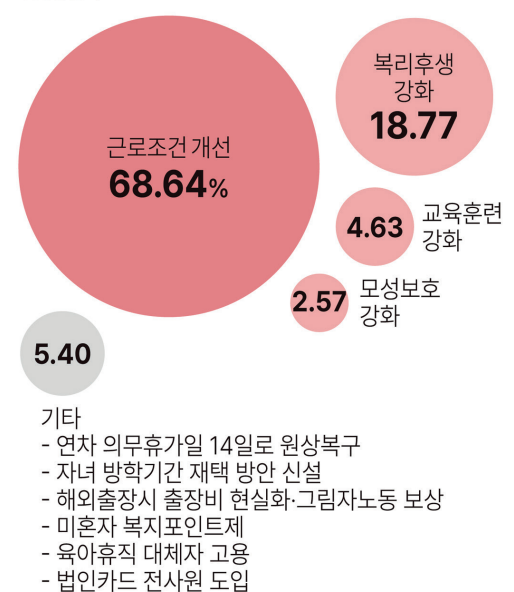
임금인상 요구 이유는?
400명 참여,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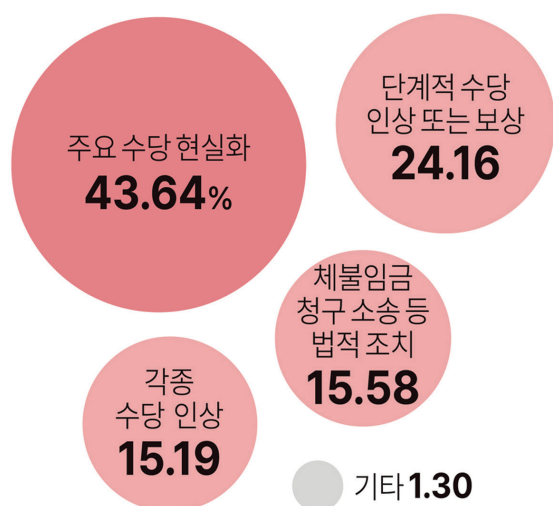
임금협상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1명 참여,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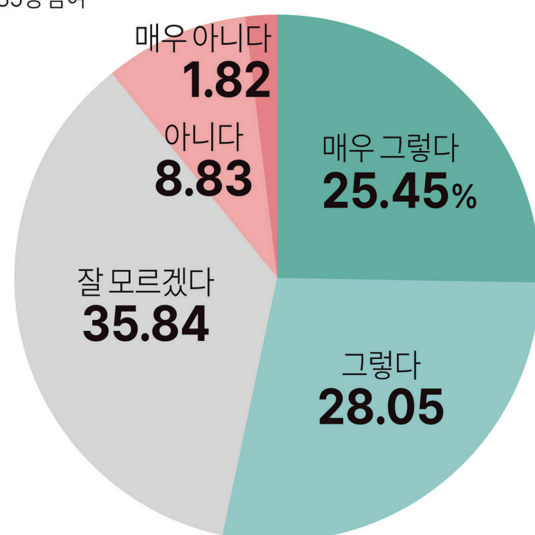
단체협약에서 꼭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389명 참여



법정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85명 참여, 2개 선택



법정 통상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청구 소송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385명 참여



20년간 불투명했던 사장 추천 절차...“악순환 고리 이제는 끊어야”

2006년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연합뉴스 사장 선출과정은 불투명했으며 원칙도 없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7차례 이뤄진 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정권의 낙점을 받기 위해 정치권은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진흥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합뉴스 사장 추천이다.

그런데 진흥회 이사회의 절대 다수(총 7인 중 5인)는 정치권이 추천하고 있다. 즉,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뉴스통신진흥법은 이같은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진흥법 제15조에는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제29조에는 ‘재직 이사 2/3 찬성으로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들 조항은 정치적 편

향을 띤 이사회의 사장 추천을 정당화할 뿐이다.

사장 선임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설치해온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도 한계가 분명하다.

위원회 5명의 위원 중 과반인 3명이 진흥회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진흥회·노조가 공동 추천하거나 노조가 추천한 외부 인사여서 정치적 편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추위를 구성하는 규정이 진흥회 정관에 존재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한계가 분명했다.

그간 진흥회는 사추위를 설치·운영하긴 했으나, 이 정관대로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과거에 진흥회는 정관을 바꿔 사추위 위원 추천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시민 평가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례도 있다.

결국 정치 후견주의를 확실하게 털어내려면 법 개정을 통해 사추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구성원 과반이 이사를 2명씩이나 추천한다고 해도 사장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면 매년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찾아다니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진흥법 개정안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0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이하 국추위)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1차 설문조사에서 하지 못했던 국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할 방침이다.

노조, 임단협 상견례서 “사람이 곧 미래”...전향적 처우 개선 촉구

사장 “임금인상 기대 매우 커...긴축재정 감내한 직원들에 보상 이뤄져야”

2025년 연합뉴스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시작을 알리는 노사 상견례가 지난달 29일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측에서는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고병준 연합뉴스지부장 등 9명이, 사측에서는 황대일 사장과 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이 삭감했던 구독료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원되면서 임단협에 대한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서울 지역 타 언론사들이 연간 3~4% 수준의 임금 인상을 이어온 반면, 연합뉴스는 임금 동결이 세 차례나 있었다”며 “구독료가 복원된 만큼 전향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섭권을 고 지부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최근 발표된 노조의 임단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임금 수준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느껴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를 모두 충족시킬 방안을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긴축경영을 감내해 온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 고 지부장은 “사장은 연합뉴스의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만, 그 ‘미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며 “사람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근간이자 미래인 만큼, 구성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조건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미래에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하다 보면 적정한 비율이 나올 것”이라며 “재원을 전부 사람에게 투입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36년간 회사를 다닌 최고경영자로서 이는 무책임한 결정일 수 있다. 실무 차원에서부터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노조는 향후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1차 실무교섭은 노측이 요구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2025년 경영실적 추정치’를 사측이 제출하지 않아 파행으로 끝났다.

노측은 핵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섭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임단협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측은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오는 13일 오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5년 임단협 노사 교섭단이 지난달 2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편 컸던 보상휴가제 개선...의무사용 줄이고 금전 보상 강화

보상휴가제 노사 개선안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1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1월 1일 시행됐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임단협 상견례 및 1차 본회의에서 '보상휴가제 개선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보상휴가 의무사용일을 기존 '16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보상휴가를 7일 적립한 이후 초과분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휴가 사용을 '의무'로 오인하게 했던 '의무사용일'이라는 명칭을 '권장사용일'로 변경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노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개선안은 1월 1일자로 시행됐으며, 지난 2년간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이달 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휴가제는 구독료 삭감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4년 3월 도입됐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2년 뒤에나 받을 수 있어 현장에

서는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8월 보상휴가제 개선 논의를 위한 노측 협의단을 구성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했으며, 9~10월 총 네 차례 협의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사 협의단은 같은 해 11월 잠정 개선안을 도출했으나, 사측이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개선안은 약한 달간 표류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불편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영진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측은 개선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실시한 개선안 찬반투표에는 대의원 42명 중 과반인 3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고병준 노조위원장은 "의무사용일 16일은 애초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보상휴가 평균 사용일수가 '6.6일'이라고 맞서면서 '7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록 원상복구 수준은 아니지



▲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오른쪽)과 고병준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2025년 임단협 1차 본회의에서 '보상휴가제 개선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만, 휴가 사용과 금전 보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작성 기자 몰래 포털고침 차단...문자 알림 시스템 도입

편집권자가 작성 기자와 협의 없이 기사를 포털고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털고침 문자 알림 시스템'이 도입된다.

노조는 지난 6일 열린 편집위원회에서 '작성 기사를 배제한 포털고침 재발방지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편집총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편집총국은 우선 포털고침이 필요한 경우 작성 기자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중요 기사의 포털고침은 부국장단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집권자 등이 특정 기사를 작성 기자 몰

래 포털고침할 경우, 작성 기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다만 작성 기자와 협의한 뒤 이뤄지는 포털고침은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편집총국은 시스템 개발에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포털고침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향후 공정정보위원회를 열어 윤리현장이

나 편집규약에 재발방지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서 제목과 본문 속 실명이 익명으로 포털고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는 2021년 10월 5일 송고된 기사로, 편집총국장이 해당 기업의 반복된 요청에 작성 기자와 협의 없이 포털고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편집총국장은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노조 이모저모]

▲ 국내출장비 30% 인상...사원 기준 13만원 지급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이 지난해 9월 '국내출장비'를 사원 기준 33%가량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출장비는 기존 8만7천원(숙박비 5만원·일당 3만7천원)에서 13만원(숙박비 8만원·일당 5만원)으로 4만3천원이 올랐다.

노조는 법인카드로 지급하는 '해외출장비'에 대한 불편인 큰 점을 고려해 개선책을 사측의 건의할 방침이다.

▲ 임신·산후 1년 내 사원 야간·휴일·연장근로 제외...모성보호 강화

지난해 3분기 노사협의회 논의 결과로 사측이 지난해 10월 '임신기 사원 근로시간 제한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노조가 임신기 사원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원은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서 제외된다.

노사는 2025년 단체협약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국인 사원 차별했던 '사우회 규정'...노조 건의로 개정

외국 국적의 사원을 이유 없이 차별했던 '사우회 규정'이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과거 사우회 규정은 모든 사원이 자동으로 가입하게끔 정하면서도 '외국인 사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원은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고, 노조는 편집총국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사우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받아들여 외국인 사원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고병준 연합뉴스 지부장,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선임

고병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이 이달 1일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에 선임됐다.

협의회는 국내 신문·통신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연대 협의체로 신문·통신 부문의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언론노조 산하 조직이다.

의장은 협의회 회원 추천과 투표로 선임되며 임기는 1년이다.

내 고충은

어디에

말해야 하나?



연합뉴스 노동조합
1:1 익명 오픈채팅방 개설

QR코드를 따라오시면
노동조건 개선 제안부터
크고 작은 민원까지 모두
익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연합뉴스지부